

무안군, 군 공항 이전 반대에 예산 28억원 쏟아 부었다

2019~2023년 예산 분석, 주민 동원 등 연간 6억 이상 쓰기도
지원조례 제정 후 견학·식비 지원...행·재정 동원 위법성 논란

단독 보도 무안군이지난 2019년부터 군 공항의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이나 조직을 지원하는데 혈세 28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해 군 공항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대한 민간 단체 보조금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응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군 공항 주변 소음 실태 확인 견학, 책자 및 영상 제작, 편지 발송, 주민 식비, 영상 차량 구입 및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행정·재정력을 총동원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식비(1인당 1만 원), 간식(3,000원), 음료(1,000원) 등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조례에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 편법 논란까지 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에 근거한 금품 제공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무안군은 선거법의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군 공항 이전 반대 행위에 참여하는 주민 수천 명에게 버스 대절 비용, 식비 등을 지원해줬다.

29일 광주일보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무안군 예산결산보고를 분석한 결과 본 예산에 2019년 5억8,063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 6억1,690만 원, 2021년 6억6,638만 원, 2022년 5억5,198만 원, 2023년 3억7,114만 원 등을 군 공항 이전 반대에 배정했다. 김산 군수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7월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재정을 투입한 것이다.

무안군의 군 공항 이전 반대 관련 사업 예산은 관련 단체 지원, 각종 사업비, 주민 직접 지원, 관련 공무원 업무 추진 등 크게 4가지로 나눠 집행됐다. 우선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조직에 대해 2020년

부터 매년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법대위에 1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지급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 바로 알기' 홍보 및 대응에 12억7,900여만 원을 썼다. 무안군 곳곳을 뒤덮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반대 안내판, 택시·버스 광고 등에 이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현수막 제작, 최대 4만 세대 서한문 발송, UCC 공모전, 법률 자문, 영상 제작 등에 별도의 예산을 쓰기도 했다.

반대 행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도 직접 예산을 썼다. 1,000명에서 2,000명의 주민들이 견학을 가는데 필요한 차량 임대, 식비 등과 주민주도형 강사비, SNS 서포터즈 활동비 등을 포함해 모두 4억 8,250만 원을 집행했다.

관련 공무원들도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업무 추진비로 매년 5,000만 원씩 2억5,000만 원, 군 공항 대응 관계기관 방문 및 자료 수집에 4억4,400만 원 등을 쓸 수 있도록 해놨다. 본예산에 포함시킨 뒤 추가경정을 하면서 관련 예산은 증감되기도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사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조계에서는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한 쪽의 의견을 지닌 단체만을 지원하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군 공항 반대 행위가 자칫 지방선거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지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의 충돌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지난 2019년 1월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무안읍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독소조항 삭제하라”

광주시·전남도 변경·신설 건의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 삭제
후보지 선정 광역단체장과 협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안) 중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강요 등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본보 5월 23일자 1면)는 판단에 따라 10개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변경, 신설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다음 달 1일 국방부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안)과 비교를 거쳐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중 4개 조항의 삭제, 변경,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의 내용은 시행령 제3조(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2항과 제6조(지원금의 환수) 삭제, 제4조(초과 사업비의 지원) 일부 변경, 지원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시기를 담은 조항 신설 등이다.

'제3조 2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에 '돈 안되는' 공원 등 공공시설 보다는 대규모 아파트 조성 등 '돈 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기존 부지(현 광주 군 공항 부지)의 가치(땅값 등)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초과사업비를 최소화하려는 꼼수 등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는 또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 사업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6조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지원금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 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도 이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초과사업비 지원 근거를 담은 4조에 대한 "지원 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한 것을 "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제15조 '이전

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는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군 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 생계 지원', '이주정착지원금' 등 대규모공항 특별법 지원사례를 검토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전남도도 시행령 내에 이전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이 아예 없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 사전 협의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 의견수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포함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 조항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해 놓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포대부와 총동참회 27차 정기총회 및 회장 미·취임식

일시
2023. 5. 30 (화) 오후 6시30분

장소
데일리웨딩컨벤션 1층 라비아홀

☎ 062-371-3500
☎ 광주 서구 상무대로 683

굿모닝 예향·남도 오디세이 미로 '무안' ▶18·19면
U-20 월드컵 16강 상대는 에콰도르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0.54kWh/일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 0.19kWh/일
비데 온열기능 끄기 0.1kWh/일
세탁물은 모아서 0.09kWh/일

올여름 계획적으로. 1kWh 줄이기로부터 시작

올 여름엔 휴가 계획보다 에너지 계획을 먼저 세워보세요. 전기 사용 패턴을 조금씩만 바꾼다면 어렵지 않게 하루 1kWh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이 많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하루 1kWh 줄이기
01. 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 유지하기 0.41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kWh/일
03.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0.32kWh/일